「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2호(2021 여름): 21-47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5 No.2 (2021 Summer)
http://dx.doi.org/10.20484/klog.25.2.2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실천적 함의: 근거이론 방법론을 기반으로*

여 관 현**
이 미 숙***

국문요약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핵심현상으로써,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 욕구'가 제시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핵심현상의 원인조건, 중재조건, 맥락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 등을 도출하였다.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 욕구가 중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 두 전문분야를 통합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법·제도적 정립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과 지속적인 마을사업의 운영 관리가 요구된다.

주제어: 도시재생사업, 스마트시티, 근거이론, 통합적 실천, 핵심현상, 맥락조건

Ⅰ.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저성장, 인구(지방)소멸, 지역 격차, 도시기능의 쇠퇴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도시 및 사회적 문제들은 지역주민의 삶과 도시의 기능 수행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강현철·최조순, 2018). 이러한 도시 공간에서 복잡하고 다양하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이 도입되었다(황윤식 외, 2019). 국토교통부는 쇠퇴해가는 도시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9S1A5A2A03045479)이며, 2021년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을 제정(2013.6.)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의 공동체 형성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단위사업의 실행을 통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발생 되는 도시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이를 진단하고 해결해가는 사업이다.

한편,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첨단 ICT 기술의 접목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정책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도시의 각종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가 구도심을 중심으로 심화 되며, 기존 구시가지의 쇠퇴와 더불어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needs)를 정부가 충족시키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도시 및 사회문제에 대응하고자 첨단기술을 적용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지능형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가상현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오병록·이지훈·고연경, 2018). 그러나 스마트시티 정책은 지능화 시설물 구축이나 통합운영센터 건설 등 신규개발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 외곽지역의 개발 감소에 따른 성장동력이 축소되고 있다. 또한, 공급자 위주의 시설 투자 등으로 정책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이영은 외, 2019).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체감도 및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게 된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구시가지 거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에서 스마트 정보기술 및 스마트 서비스를 연계하여 각 사업지역에 약 30억 규모의 정부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조상필, 2019). 그러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이 실천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CCTV 등 안전도시, 무인 주차, 스마트 태양광, 그린 리모델링 등 스마트 서비스와 기술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스마트 기술의 필요성이나 구체성 등이 부족하다. 또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스마트 기술의 필요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등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이영은 외, 2019).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의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천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질문에 대한 답을 본 연구의 분석과정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이 실천되는 현장에서 주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와 기술적용이 실천 가능한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내용을 경험적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사례분석 대상 지역은 2017년도에 최초로 시행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경기도 남양주시와 인천시 부평구, 경기도 고양시 등 3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2017년에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12월

현재까지 추진되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인천시 부평구, 경기도 고양시 등 3개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사례로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공간적 범위는 2017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기도 남양주시, 인천시 부평구, 경기도 고양시 등이며, 시간적 범위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로 한정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적 특성이나 주민들이 희망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전역에서 급증하게 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기술의 선정 및 적용 용이성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현장에서 스마트시티가 통합적으로 실천되며 다양한 주민체감형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출발하게 된 대도시의 무분별한 시가지확산과 도심쇠퇴 현상은 원거리 통근 및 수송을 유발하여 석탄자원의 낭비, 교통 혼잡을 비롯한 환경오염 등의 도시문제를 초래한다. 도심의 인구 감소 및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환경의 악화 등으로 구도심 및 기반시설의 도심 공동화와 상업시설 기능의 쇠퇴 등의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도심지의 사회적 이기주의와 실업률 증가 및 도시범죄 등과 같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50년대에는 도시재건 방식이 재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970-80년대에는 도시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 방식의 물리적 주거환경정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쇠퇴하고 있는 구시가지를 회복시키고 침체 되어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물리적 환경개선 효과가 지속하지 못하고 재 슬럼화는 도시문제의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도시문제의 정책적 대안으로서 도시재생이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노춘희 외, 2017).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특별법」(2013.6.4 제정)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13.12.31 고시) 등을 법적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경제기반이 상실되거나 근린생활 환경이 불량한 도시 내 쇠퇴지역의 경제·사회·물리적 재생을 실천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과 지원확산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실행된다. 「도시재생 특별법(제2조 1항)」에서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가 간 경쟁력이 중요시되는 시대에서 도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도시재생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8).

스마트시티는 네트워크에 의한 지식기반 사회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오프라인 공동체 생활뿐만

아니라, 온라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체 형성도 증가하여 타인과의 소통이 증가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행정이 시민과 상호 소통 및 협력할 수 있는 통로를 형성해준다. 이러한 다차원 방향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은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하며, 네트워크 내 구성원들로부터 다양한 지원의 수렴이 가능하다(Anderson, 2008). 스마트 네트워크 사회는 상하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어느 특정한 주체가 일 방향으로 정보를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형성되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자산이 정보로 제공된다.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스마트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행정이 주민을 일방적으로 이끌게 되는 기존의 일방적 관 주도(top-down) 방식의 정책실행과는 다르게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사회 현장에서 마을주민이 행정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즉, 도시재생사업은 행정과 지역주민이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협력적 활동이므로 주체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따라서 쌍방향 의사소통과 활동을 기반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상호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등이 필요하다(이영은 외, 2019). 따라서 스마트시티형 재생사업은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이 도시재생사업에 적용되며, 도시재생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쇠퇴한 도시공동체를 재건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2. 통합적 접근분석을 위한 근거이론 방법론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실천을 위한 시사점 제시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인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도시재생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연구 초기의 궁금증은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원활한 통합적 실천을 위한 행정과 도시재생센터 및 지역활동가 등의 참여 주체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도달하였다. 이런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도출하는 연구의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않은 연구방법들을 예로 들자면,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주체들을 대상으로 표본(sample)을 추출하거나 이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뒤, 이들과 관련된 1차 또는 2차 자료들을 수집함으로써, 이들의 영향요인과 주요활동 간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계량적 연구방법이 등이 포함될 수 있다(김태영, 2016; 여관현, 2017).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주체들의 이해가 중요하므로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 방법론은 인식과 대응으로 표현되는 참여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 대상자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도출과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Strauss and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Strauss

and Corbin(1998)의 근거이론이 Glaser(1978)의 방법론과의 차이점은 축코딩의 분석과정에서 구성되는 패러다임 모형의 존재 여부에 있다. 축코딩은 개방코딩(open codimg)의 구조화 과정 이후에 시행되는 단계로서 개별 범주 간의 연결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결합하는 과정이다(도명록, 2015). 이러한 코딩 패러다임 모형은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의미를 형성하며 각 범주 간의 관례를 명확화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확장하는데 유용하다(이자은, 2019). Strauss and Corbin의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은 주요 행위자들의 심층 인터뷰, 관련 문헌 등 다양한 자료를 해체 및 개방과정(open coding)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에 내재 된 핵심현상, 스토리(story), 행위요인 등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주요 현상들을 개념화한다(Strauss and Corbin, 1998; 김태영, 2016; 여관현, 2017 재인용).

1960년대에 Strauss와 Glaser에 의해서 시작된 근거이론 방법론은 사회과학 분야의 질적 연구방법론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1980년대에는 간호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인용되었다(최귀순, 2005).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석·박사 학위 논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학술논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여관현, 2017). 국내에서 그동안 진행된 근거이론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근거이론 방법론의 이론과 관련된 연구(최귀순, 2005; 김준현, 2010; 권향원·최도림, 2011; 김인숙, 2011; 최지영, 2012; 이동성·김영천, 2012)와 특정 분야 또는 특정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최홍석 외, 2003; 이숙정·이경아, 2007; 한승주, 2010; 김성곤, 2011; 이영범 외, 2012; 이도희·김현미, 2013; 이민우·이명식·정성원, 2016; 이현주, 2016) 등이다.

한편, 근거이론의 이론연구는 근거이론이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론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었다. 국내에서 진행된 근거이론 방법론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Strauss & Corbin(1990, 1998)의 분석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그 이후로 근거이론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들은 Strauss & Glaser 등 근거이론의 활용 가능성 및 한계 등을 연구한다. 대표적인 연구로 최귀순(2005)은 근거이론 방법론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Strauss와 Glaser의 근거이론 견해 차이에 주목하고 방법론상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권향원·최도림(2011)은 근거이론 방법론의 정당화 논리에 대한 탐색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하에, 근거이론 방법론의 이론적 논리를 고찰하였으며, 이동성·김영천(2012)은 Strauss & Glaser의 근거이론을 조망하고 근거이론의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거이론은 질적 연구 논리와 양적 연구 논리가 결합 되어 연구 패러다임이 상이 한 질적 및 양적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인 연구방법론임을 주장하였다.

3.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 관련 선행연구 고찰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 관련 선행연구는 2000년 후반기 이후에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송미령·성주인, 2004; 홍연 외, 2012, 김경화 외, 2015; 배남인, 2016; 여관현, 2017; 윤병훈 외, 2020)과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 요인(이영아 외, 2008; 홍순구 외, 2014; 성순아, 2015; 이자은, 2019), 스마트시

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적용 및 활성화 방안(오병록·이지훈·고연경, 2018; 이희정 외, 2019; 조상필, 2019; 이영은 외, 2019; 조준혁, 2020) 등이다. 우선, 송미령·성주인(2004)은 주민참여 실태 및 마을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주민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마을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긍지도가 향상됨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모형을 정립하였으며, 배남인(2016)은 11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참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관현(2017)은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의 사례를 근거이론으로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될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의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홍순구 외(2014)는 감천마을 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는 만족한 느낌, 삶의 활력, 참여에 대한 즐거움 등 내재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식의 다양화 및 행정적 신뢰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성순아(2015)는 도시재생 테스트 베드(test-bed)인 창원시와 청주시를 대상으로 추진방식에 따른 지역주민의 참여 동기와 지속의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 주도의 재생사업인 경우, 지속적인 주민참여로 안착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참여의지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참여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자은(2019)은 서울시 장위동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의 경험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과 형태가 변화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참여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재생사업이 주민과의 쌍방향적 상호 소통을 지향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지만, 상호 소통의 문제로 인해 공공부문과 활동가,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함을 제시하였다.

오병록·이지훈·고연경(2018)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전주, 완주 등 전라북도 사례조사를 통해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라북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여건은 전반적으로 미약하였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전략으로서 전반적인 사회여건 수용에 대응, 주민 수요에 대응, 지역자원 연계형 도시재생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여건 수요에 대응하고자 스마트시티 통합 플렛폼 구축, 스마트 가로등 설치, 독거노인 케어 시스템 구축, 사회적 약자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이영은 외(2019)는 도시재생 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스마트 기술적용 방안과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 도시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법과 도시재생 특별법 간 연계를 극대화하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 line)의 구체화 및 기술 적용기준 설명서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상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에서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사례조사를 통해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안을 제안하거나 스마트 적용기술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기간은 길지 않으며,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각각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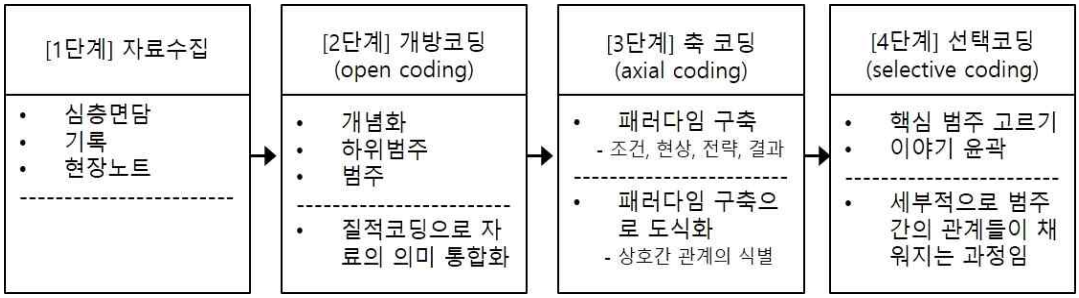
따라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이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 관점에서 원활하게 실천되기 위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천 방안 마련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 현재까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들은 제도적 또는 스마트 적용기술 등 제한적이다. 또한,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과정의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는 미미하다.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천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Ⅲ. 연구방법론

근거이론 개념은 Glaser and Strauss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밝히는데 유용한 방법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1967년에 'Discovery of Grounded Theory'라는 서적에서 처음으로 제시된다(Schreiber & Stern, 2001). 근거이론(grounded theory) 개념은 다음과 같다(김준현, 2010). 첫째, 하나의 질적 연구 분석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되거나 분석되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된다(Strauss & Corbin, 1998). 즉, 근거이론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하게 되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변화에도 설명이 유용하다(Schreiber & Stern, 2001). 둘째, 근거이론은 하나의 체계적인 분석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을 귀납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발전시키는 질적인 연구방법론으로 활용된다(Schreiber & Stern, 2001; Strauss & Corbin, 1998). 근거이론은 귀납적 접근방법의 하나로서, 연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창조성을 허용하게 된다(Mores, 2001). 근거이론의 유용성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이론이나 이미 정의된 통상적인 개념을 배제하고 준비된 자료를 수집하며 코딩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규칙과 개념 및 속성 등을 밝히게 된다(Galser & Strauss, 1967).

근거이론은 일반적으로 사례조사에서 수집된 다양한 방식들의 자료들을 개념화하거나 수집된 자료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추상화된 범주들을 유형화하는 분석과정을 거치게 된다. 근거이론에서 수집된 다양한 자료의 분석과정은 하나의 코딩(coding)과정으로 구체할 수 있다. 근거이론에서는 주로 면접방식이나 관찰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일차적으로 수집하게 되는데, 수집된 자료는 연구에서의 면접 대상자들이 실제 경험한 사건이나 행동들을 재현하거나 기억하는 대로 기록하게 된다(Silverman, 2011). 이렇게 분류된 개념들을 그들의 관계에 따라서 일정한 범주로 묶고, 그러한 범주들 가운데 핵심 범주를 선택하여 다른 범주들과 인과적 관계를 제시한다(Strauss & Corbin, 1998; 한승주, 2010). 이렇게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구조화하는 것이 코딩과정이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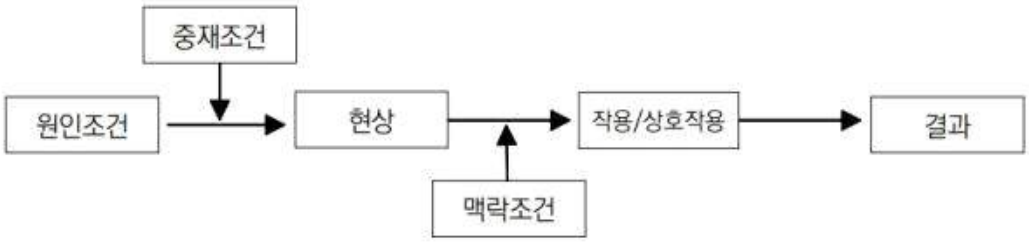
〈그림 1〉 근거이론 방법론의 코딩과정



자료: 이자은(2019: 28)

Strauss and Corbin(1998)의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근거이론 패러다임 분석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6개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원인조건(causal conditions)은 어떠한 형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써, 하나의 현상을 초래하는 인과적 구조나 환경 및 상황 등을 의미한다. 둘째, 중재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은 현상에 대한 인과적 조건들의 작용을 매개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중재조건은 원인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 또는 완화 시키게 된다. 셋째, 현상(phenomenons)은 해당 연구 분야에서 핵심적인 대상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연구 분야에 있어서 '진정으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넷째, 맥락조건(contextual conditions)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람들이 작용 및 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하는 상황이나 문제를 의미한다. 다섯째, 작용/상호작용(interactions)은 원인조건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한 전략적 행위나 일상적인 행위들을 의미한다. 여섯째, 결과(consequences)는 개인들 혹은 집단이 선택한 전략적 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상황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반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건들을 의미한다.

〈그림 2〉 본 연구의 근거이론 패러다임 분석모형(분석 틀)



자료: Strauss and Corbin(1998: 128); 여관현(2017: 48)

이렇게 도식화된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은 코딩 패러다임의 각 요소 간의 관계들이 온전하게 일 방향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즉 원인조건이나 중재조건 등이 거시적일 경우, 맥락조건, 작용/상호작용, 그리고 주요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며, 작용/상호작용의 경우도 핵심현상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근거이론에서의 코딩과정은 연구 대상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수집된 공통

사항을 다음의 3단계 코딩과정을 거치면서 구조화를 진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선택코딩 과정에서 구성된 각 범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3단계 코딩과정을 적용하였다. 즉,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실천내용 등을 도출하기 위한 코딩 패러다임의 원인조건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요인으로써, 핵심현상과 작용/상호작용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참여 주체들 간 사업추진 행위를 위한 실천과정으로써, 그 결과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성과로 한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을 2017년도에 처음으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시범지구로 선정된 3개 지역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20년 7월 현재까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에 5개 지역 2019년에 3개 지역이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에 시범사업을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시범지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과정이나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도출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3개소의 사례지역으로 한정하고, 2017년 시작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직접적인 참여 주체를 심층 인터뷰하였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2017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시작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 주요 행위자로 참석하면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상황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의 근본적인 스토리(story)를 경험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참여 주체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시범지구로 선정된 3개 지역의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심층 인터뷰 대상자

사업명	대상자	직위	선정 사유	인터뷰 날짜
부평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Actor (1)	담당 주무관(P)	부평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제안한 2017년 시작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 사업의 행정지원 주체로서 실무적으로 참여함	2020. 7.20
	Actor (2)	사무국장 (C)	부평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실무 책임자로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에 실무적으로 참여함	
	Actor (3)	스마트시티 전문코디 (K)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스마트 기술적용 및 사업화 방안 등을 함께 구상하는 스마트시티 전문가로서 참여함	2020. 8.10
남양주시 금곡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Actor (4)	센터장(G)	금곡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시작된 2018년 처음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 현장센터 총괄책임자로 참여함	2020. 7.22
	Actor (5)	공동체 담당코디 (K)	금곡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시작인 2018년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리빙랩 등에 참여함	
고양시 화정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Actor (6)	센터장(D)	화정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2018년 처음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 현장센터의 사업 책임자로서 참여함	2020. 7.27
	Actor (7)	LH 연구원 연구위원 (L)	화정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주체인 LH 연구원의 주체로 참여하여 시범사업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19년 계획수립 단계까지 실질적으로 참여함	2020. 8.10

Ⅳ. 통합적 실천을 위한 근거 이론적 분석결과

1. 핵심현상: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 욕구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을 통해서 도출된 개념적 범주들을 중심으로 개념적 유사성을 가지는 내용을 새롭게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더 추상적인 범주화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핵심현상으로 추정될 수 있는 새로운 현상들의 범주화와 이들을 새롭게 유형화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세부적인 핵심현상의 범주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행위 주체인 행정 실무담당자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및 사무국장, 스마트시티 전문코디 및 연구위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의 실천에서 행정과 마을주민의 참여 욕구 및 주거환경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실천 욕구가 나타났다(〈표 2〉 참조). 이러한 마을의 변화와 주거환경 변화에 대한 행정과 주민들의 실천 욕구가 만들어 지면서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표 2〉 근거 이론적 코딩 패러다임의 핵심현상

코딩 패러다임 요소	주요범주	하위범주	개념
핵심현상: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의 실천 욕구	마을주민의 마을환경 개선 욕구	주민참여와 협력적 관계	거버넌스, 주민 간 소통, 공동체 형성, 주민제안, 골목상권 활성화, 주민협의체, 행정부처 간 협업, 스마트 전문코디, 드론안전 분과, 분과사업, 대학연계, 주민협약서
	행정과 현장센터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실행 욕구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대학, 주민참여 리빙랩, 주민사랑방, 주민 의견, 도시재생 실행계획, 단위사업 운영 및 관리, 주민 체감형 서비스, 주민워크샵, 주민설명회, 주민회의
		마을사업 논의 및 사업구상	아이디어 구상, 단위사업 구체화, 범죄예방 설계, 안전, 아날로그, 도로 다이어트, 스마트 그늘막, 스마트 벤치, 스마트 가로등, 로봇주차, 디지털 트윈, 스마트 공연장, 드론 센테 건립, 스마트 커뮤니티 플렛폼, 태양광 놀이터

다음의 심층 인터뷰 내용은 '마을주민의 마을환경 개선 욕구'에 관한 핵심현상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심층 인터뷰 내용은 고양시 화정동 LH 연구위원 L모 씨와 부평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C모 씨와 남양주시 금곡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G모 씨의 '주민참여와 협력적 관계'에 대한 의견이다.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주민들의 마을환경 개선 욕구로부터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즉, 주민들이 제안한 마을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주민제안 및 주민협체 분과 역할 등을 통해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된다.

"주민분들 중에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불편한 부분들이 사실은 범죄 예방설계라든지 지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분들은 많은데, 여기에 정말 스마트시티에서 어떤 걸 하는 게 서비스가 좋은지? 우리는 상권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제안해서, 그래서 화정역이나 이런 곳에 뭔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서비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땐 논의가 이렇게 드론 서비스 이렇게 4차 산업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게임 하는 그런 거, AR 그런 것들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항공기 전시를 하자는 것이 주민이 제안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드론안전 분과가 있는데, 거기 분과장님이 이제 이런 드론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을 활성화하는데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마을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L〉

"얼마 전에 서울시가 네이버스와 디지털 트윈 만들었어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시스템도 엄청 무겁고, 행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주민들이 사용했을 때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아요. 주민들이 제안하여 저희와 함께 만들려는 거는 디지털 트윈은 맞는데, 도시에 대한 필요 없는 정보를 다 넣는게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상가에 대한 정보, 상권에 대한 정보를 베이스 맵으로 깔고, 지금 진행하는 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주민홍보사업, 주민제안사업 등을 이 플랫폼에 담아볼 계획이거든요." 〈C〉

다음의 심층 인터뷰 내용은 '행정과 현장센터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실행 욕구'에 관한 핵심현상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심층 인터뷰 내용은 부평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담당 주무관 P모 씨와 남양주시 금곡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G모 씨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천 노력'에 대한 의견이다. 부평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담당 주무관 P모 씨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합리적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양주시 금곡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G모 씨는 마을에서 주민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주민 체감형 마을사업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담아내는 과정을 강조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필요한 스마트 서비스 기획안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 기획안은 스마트형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 여기서 있는 실행계획 용역을 구체화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토부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형태의 용역을 추진하면서 스마트 서비스를 확정하고, 그 스마트 서비스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나온 의견들과 설문조사를,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어요." 〈P〉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할지 몰라서 사실 아날로그적인 것부터 먼저 했어요. 2년 전에는, 여기 서울처럼 사랑방 구성해주는 건 좀 모여야 뭐라도 하니까 주민들은 그런 식으로 참여했고 스마트는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은 손에 잡히지 않으

니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하겠다. 왜냐면 저희가 사랑로와 금곡로하고 도로 다이어트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벤치, 횡단보도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지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반기에 주무관하고 정리한 것이, 하나하나 지워보자, 그런 다음에 활성화 계획을 올해 말까지 변경하기로 했어요.” 〈G〉

2. 원인조건: 전문인력 부족과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의 어려움

상기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에서의 핵심현상에서 살펴본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의 실천 욕구’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원인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마을주민이 마을 내부 또는 마을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적 또는 갈등적 상호관계를 형성하면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천 환경을 점진적으로 형성하고 실현하게 된다. 이러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원인조건을 살펴봄으로써,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을 실천하기 위한 주민들의 욕구 발생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천과정에서 마을주민 간, 마을 외부의 전문가, 공공(시청, 구청, LH 연구원), 현장센터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를 형성하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였다. 여기서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천에 대한 저해 요인을 원인조건으로 정의하여 살펴보았다. 즉, ‘전문인력 부족의 어려움’과 ‘부처 간 협업의 어려움 및 주민갈등’의 내용으로 코딩 패러다임의 원인조건을 다음의 〈표 3〉과 같이 구조화하였다.

〈표 3〉 근거 이론적 코딩 패러다임의 원인조건

코딩 패러다임 요소	주요범주	하위범주	개념
원인조건: 전문인력 부족과 행정부처 간 협업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의 어려움	인적자원 부족	전문가 부재, 주민역량 강화, 마을리더 양성, 인재 발굴, 스마트시티 전문가, 도시재생 전문가, 이분화, 전문가 부재
	부처 간 협업의 어려움 및 주민갈등	행정부처 간 협업의 어려움	성과공유, 협업사업, 공동의향서, 업무량 증가, 인력과 비용 고정, 부처 간 갈등, 협업의 어려움, 행정지원협의회 운영
		주민 간 갈등	주민과 상인의 의견 차이, 세대 간 갈등, 주민의 궁금증과 불만, 민원 발생, 사업의 이해 부재, 주민 의견수렴 어려움, 사업구역 경계의 갈등

다음의 심층 인터뷰 내용은 ‘전문인력 부족의 어려움’에 관한 원인조건의 내용을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심층 인터뷰의 내용은 양주시 금곡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G모 씨와 부평구 스마트시티 전문코디 K모 씨 등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전문인력 부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스마트시티 전문가의 인적자원 부족 요인을 주로 이야기한다.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두 전문분야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꼭 필요하지만 두 분야를 모두 제어 가능한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계약직으로 스마트시티 하실 때 LH 연구원으로 계셨던 그분이 자문처럼 같이 회의 석상에 들어왔었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스마트시티를 이야기하고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하고도 결이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막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모호하게 진행되었죠. 그래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까. 지금 상태에서는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사업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전문가를 센터 전문코디를 뽑기도 어렵지만, 뽑아본들 많이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예요." 〈G〉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사업 양쪽을 어느 정도 아는 조직이 있으면 그럼 좋은 거죠. 사실은 스마트 도시재생도 양쪽을 다 아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문가를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아까 스마트시티 총괄이랑 같이 워크숍 했다고 그랬잖아요. 스마트시티 관련 IT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서비스를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서비스를 넣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런 게 있어요. 신도시 같은 경우 설계를 할 때 서비스는 대부분 통신과 전기가 인프라로 깔려야 되거든요. 설계가 현재 이만큼 용량이 들어갈 수 있는 거에다가 향후 인구나 시설이 늘어날 걸 고려했을 때, 이만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요구하면 될 수 있어요. 그게 토목공사 때 처음부터 반영이 되는 거죠." 〈K〉

다음의 심층 인터뷰 내용은'부처 간 협업의 어려움 및 주민갈등'에 관한 원인조건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인터뷰 내용은 고양시 화정동 LH 연구위원 L모 씨와 부평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C모 씨, 고양시 화정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D모 씨 등의 '부처 간 협업의 어려움'과 '주민 간 갈등' 등에 대한 의견이다. 부처 간 협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시장 또는 부구청장 주재로 행정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재생 부처와 스마트시티 부처 간 업무 영역이나 역할을 두고 서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스마트시티 부처의 경우 예산과 인력이 도시재생 부처에 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성과나 실적에 대한 부처 간 이견으로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 간에도 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주민과 상인들 간 입장이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이견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세대와 젊은 주부세대 간 의견이 차이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유발되는 양상을 형성하고 있었다.

"도시재생 부서와 스마트시티 부서 간의 협조가 잘 안된다고 해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사업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업예산을 도시재생 부서에서 다 받잖아요. 근데 협업사업으로 스마트시티 부서로 업무협조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업무량은 늘지만 그에 따른 인력과 비용은 늘어나지 않아요. 이런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협업부서에서는 대부분 싫어해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협업이 안 되니까 아무리 한 부서에서 하더라도 어렵잖아요. 그거는 서로 부서 간 협업할 수 있게끔 아니면 같이 성과를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운영은 예산 부서에서 하고 사업부서에서 공동의향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각 부서의 팀장님을 참여시키는 형태가 필요할 거 같아요" 〈L〉

"저희가 사업대상지 규모로 봤을 때 60억인데 이것은 적은 돈은 아니예요.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제 별도의 서버, 별도의 PC, 별도의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Hardware 비용도 들어가니까요. 이게 부서 간의 협업이 정보통신 부서와 협업이 잘되거나, 정보통신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Hardware 부분에 대해서 받아주면 서버 비용이나 뭐 요런 걸 덜 쓰고, 단위 서비스를 더 넣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타 부서와 협업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나 인력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C〉

"주민들과 상인들 관계가 좀 개선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주민 몇몇 분이라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어려운 점이,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이랑 약간 젊으신 분들 그리고 주부분들 간의 그 갈등이 주민들이 모인 내부에서도 꽤 많아요. 어르신들이 젊은 분들 의견에 꼬장꼬장하시고, 그래서 혼내시고 하시니까. 여기 마을에는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처음에 이렇게 주부분들이 나오셨다가 나가신 분도 있으세요. 그때 나오셨던 주부분들은 별도로 뭔가 주민공동체를 만들거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 회의나 리빙랩 워크숍 등을 하는데, 이런 분들을 함께 합쳐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다는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D〉

3. 중재조건: 통합적 접근을 위한 제도화 정립

상기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원인조건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문인력 부족과 행정부처 간 협업의 어려움'이라는 코딩 구조화에서의 원인조건이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을 실천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코딩 구조화의 핵심현상들을 변화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는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요인으로서 중재조건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제도 정립' 측면을 코딩 구조화의 중제조건으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코딩 구조화의 중재조건 내용과 이와 연관된 핵심유형과 하위범주 등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근거 이론적 코딩 패러다임의 중재조건

코딩 패러다임 요소	주요범주	하위범주	개념
중재조건: 통합적 접근을 위한 제도 정립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법·제도적 정립	광역·기초단체 차원의 제도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법·제도의 목표 달성	도시경제 활성화, 중심상권 회복, 주거기능 증진, 지역공동체 회복, 일자리창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물리적 환경개선, 지속가능한 도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천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의 중재조건에 대한 주요범주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법·제도적 정립'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또한, 하위범주는 '광역·기초단체 차원의 제도화'와 '법·제도의 목표 달성' 등의 두 유형으로 구조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하위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정리하면, '광역·기초단체 차원의 제도화'에는 '도시재생 특별법,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등이, '법·제도의 목표 달성'에는 '도시경제 활성화, 중심상권 회복, 주거기능 증진, 지역공동체 회복, 일자리창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회복, 물리적 환경개선, 지속가능한 도시' 등이 포함된다. 다음의 심층 인터뷰 내용은 '광역·기초단체 차원의 제도화'에 관한 중재조건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 "동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스마트 시범사업처럼 세종시 전체 스마트마스터 플랜이 있고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금곡동 하나를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그래야 아마 스마트 도시과도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 전체 남양주 기본계획안에서 스마트에 대한 시도, 찾동 같이 10분도 쉽게 복지 사각지대 프로젝트를 금곡동에서 추진사업은 어떤 것이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스마트시티 사업은 남양주시 스마트 종합기본계획이 준하여 뭐 작동한다는 전략계획으로 한 줄만 써주면 되거든요. 이것들은 금곡동을 시범사업을 한다. 우리는 상위계획은 남양주시 스마트 기본계획을 준하여 실행한다.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이런 한 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G〉

>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상위법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 특별법」 등의 제도적인 문제가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내부의 조례로 실행되는 사업들은 스마트시티 주식회사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시의회에서 얘기를 해요. 시에서 얘기를 하고 상위법에 걸리지 않는 한, 이거는 해야 한다. 그다음에 상위법을 건드려야 되는 경우는 국토부랑 얘기할 수밖에 없죠. 국토부랑 얘기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지만 역시 저희가 페이퍼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예전보다 많이 열린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예산 문제도 이제는 완전히 별개였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도시 재생사업 안에 스마트 IT가 들어가잖아요. 예산반영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게 전혀 없던 게, 전에는 완전히 분리돼 있던 게 이렇게 넣어주기 시작을 한 거죠. 국토부 실무부처 쪽에서 그런 걸 인식이라고 적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효과를 내준다면 효과를 보여준다면 앞으로 이게 더 늘겠죠." 〈C〉

4. 맥락조건: 합리적 의사결정과 주민참여의 한계

근거이론의 코딩 구조화에서 맥락조건은 특정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연구 대상자들의 작용 및 상호작용을 만들어 가는 조건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김태영, 2016; 여관현, 2017).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과 유형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코딩 구조화에서의 맥락조건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주민참여의 한계'로 도출하게 되었다(〈표 5〉 참조). 즉, 중재조건으로 작동되는 맥락조건의 주요범위로는 '주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부재와 주민참여의 어려움'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5〉 근거 이론적 코딩 패러다임의 맥락조건

코딩 패러다임 요소	주요범주	하위범주	개념
맥락조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주민참여의 한계	주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부재와 주민참여의 어려움	주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부재	주민협의체 미구성, 지역주민의 이권 관계, 개인 민원 수준, 운영위원회, 주민회의
		주민참여의 어려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대학, 사업구역 경계의 한계, 주민들 간의 오해, 상인회 주민참여의 불규칙, 스마트시티의 무관심

다음의 심층 인터뷰 내용은 '주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부재와 주민참여의 어려움'에 관한 맥락조건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인터뷰 내용은 부평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담당 주무관 P모 씨, 고양시 화정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D모 씨, 남양주시 금곡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G모 씨 등의 '주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부재와 주민참여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과 원활한 실천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 기구의 설립이 중요하다. 그러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구인 주민협의체조차 설립되지 않고 진행되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 회의와 운영위원회, 주민설명회, 주민워크숍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현재 그 코로나 19나 뭐 비대면 서비스를 떠나서 2017년부터 주민협의체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주민지원사업들 꾸준하게 증가함에도, 아직 까지는 저희가 주민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들어온 의견들도 동네에 대한, 지역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보다는 많은 부분이 지역주민의 이권 관계, 개인 민원 정도의 수준의 그런 문제점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도 주민들하고 같이 해 보려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대학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P〉

"주민참여에서 가장 어려운 건 주민협의체 분들은 이제 좀 열심히 해주시는데 열심히 하셨다가 너무 지치세요. 그런 순간이 오더라구요. 지치셨다가 다시 좀 참여하셨다가 그렇게 반복되어요. 그리고 확실히 상인분들이 어렵더라구요. 저희가 현장답사를 가더라도 주말에 가고 상인분들 많잖아요. 저희 뭐 행사할 때 꼭 3시에서 5시 그 사이에 저녁 준비하셔야 하고, 그런 타이밍인데 그거에 맞춰서 주민협의체 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거 딱 맞춰서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럴 때 힘든 거 그리고 한번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다가 좀 하다가 뭔가 오해가 생기거나 갑자기 또 확 돌아서시곤 합니다." 〈D〉

"주민협의체를 얘기할 때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처음에 잘 가르마가 안 타졌는데 주민들이 참견하시고 의견 주시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전문가로서 한 발짝 나가야 할 것도 있더라고요. 주민분들이 처음에는 스마트시티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뭔지 모르니까 행정복지센터 언제죠 이런 거는 물어봐도 스마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주민분들이 뭐라고 물어보시는 건 사실 저희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아트센터 건립 언제죠? 행복주

택 완공이 언제죠? 도로 다이어트는 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언제 하는데? 저희 판단은 상권 활성화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토지 등 건물 바쁘신 분이 우리 뭐 해줄 거야? 뭐 지원해 줄 거야? 사업에 대해 센터에서 설명을 많이 드리긴 했지만 한 번도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여쭤보신 주민은 거의 없었어요." 〈G〉

5. 작용/상호작용: 주체별 역할 정립과 마을사업의 실천 방안

상기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코딩 구조화의 3가지 요건(원인조건, 중재조건, 맥락조건 등)은 어떠한 현상들이 처해있는 조건적 맥락의 측면에서 Strauss & Corbin(1990)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부분들을 근거이론의 구조적 측면(structure aspect)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작용/상호작용은 상기의 조건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나 이슈들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면서 연구 대상자의 핵심현상에 대응하는 반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정적 행위(process action)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작용/상호작용은 맥락조건들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들의 문제나 이슈들을 복수의 방식으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행위(action)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코딩 구조화의 작용/상호작용은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의 실천 욕구'라는 핵심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행위뿐 아니라, 맥락조건에서 참여 주체들이 경험하게 되는 주요 이슈들과 실천내용 등을 발견하게 된다.

〈표 6〉 근거 이론적 코딩 패러다임의 작용/상호작용

코딩 패러다임 요소	주요범주	하위범주	개념
작용/상호작용: 주체별 역할 적립과 마을사업의 운영 관리	주체별 역할 정립	주민과 행정, 센터의 역할 정립	마을사업 제안, 마을현안, 문제해결, 통합적 주민조직, 주민대표 기구, 예산 지원, 회원관리, 공동체 형성
	마을사업의 운영 관리	마을사업의 운영 주체	주민협의체, 분과운영, 시설관리공단, 수익 창출, 마을관리 협동조합, 주민거점시설 운영, 집수리 협동조합
		마을사업의 관리 및 유지보수	로봇 주차장 관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CRC 설립, 주민커뮤티니센터, 마을관리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본 연구에서는 코딩 구조화의 작용/상호작용을 다음의 〈표 6〉과 같이, '주체별 역할 적립과 마을사업의 운영 관리'인 것으로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부분을 작용/상호작용의 요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의 심층 인터뷰 내용은 '주체별 역할 정립'에 관한 작용/상호작용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심층 인터뷰 내용은 부평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담당 주무관 P모 씨의 '주체별 역할 정립'에 대한 의견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과 원활한 실천을 위해서는 마을 의제 발굴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리빙랩 등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과 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며, 주민들이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마을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등의 주민대표 기구와 주민조직이 결성 및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스마트도시를 어떻게 마을에서 필요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의제 발굴부터 인제 활성화 계획에 담아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리빙랩 이런 걸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그 지역의 문제를 스마트도시의 여러 가지 뭐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로봇 주차장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스마트도시의 그런 제안 뭐~ 어떤 걸 주민들이 원한다고 얘기 하기가 실제로는 꽤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들... 지금은 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주체들이 같이 협업하고 있는지? 사실 참여 주체들 간 협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처나 참여 주체들 간 협업이 잘 안되면 대단히 어려워 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담당 부처가 이제 좀 이분화되어서 그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아직도 협업이나 통합적인 접근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가도 사실... 도시재생 전문가가 따로 있고, 스마트도시 전문가가 또 따로 있고, 부평구는 아직 이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P〉

다음의 심층 인터뷰 내용은 '마을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작용/상호작용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심층 인터뷰 내용은 부평구 스마트시티 전문코디 K모 씨와 남양주시 금곡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G모 씨의 '마을사업의 운영 관리'에 대한 의견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과 원활한 실천을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담겨진 마을사업이 실행되었을 때 앵커시설 및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할 주민공동체 양성이 필요하다. 즉, 스마트형 도시재생사업이 단위사업이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도록 지역사회의 마을관리협동조합(CRC)이 운영될 수 있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을 위한 주민 조직화 및 주민역량 강화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한 스마트형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마을사업의 운영 관리 주체는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 보고 있어요. 뭐 가로등 같은 경우 당연하잖아요. 스마트 벤치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를 당연시 여겨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주차장 관리를 누가 할 건데 여기 비용들은 어떻게 할 건데 얘기 나오거든요. 주차장 만들 때 거기에 관리자 한 명이 들어가야 한다. 이거는 원래 생각했던 거예요. 플러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죠. 그 민원들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절감할 수 있는 비용효과가 있죠. 그걸 여기다 운영비용으로 쓰자는 것이고 관리비용은 생각보다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K〉

"공연장으로 생각 안 하고 벽면에 그런 홀로그램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석영 전시관이라든지 이석영 전시관에 대한 그 컨텐츠들이 계속 상영되는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간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 사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동 단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남양주시가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여기를 한다고 하면 그럼 그거를 받고 운영 주체를 받을 수 있는 과가 있다면 훨씬 뭔가를 벌릴 수는 사업비도 쓸 수 있어요. 50억이니까 정말 스마트과에서 못하는 30억짜리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되는 거예요." 〈G〉

6. 결과: 마을주민의 참여의식 변화와 마을사업 발굴 노력

코딩 구조화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결과는 상기의 행위 주체들 간의 작용/상호작용으로서 나타나는 결과물인 것으로 정의된다. 결론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한 참여 주체들 간의 작용/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나 주요 행위자들 간의 새로운 변화들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한 참여 주체들의 새로운 변화로서 '주민의 참여의식 변화와 마을사업의 발굴'이라는 내용을 코딩 구조화의 결과(consequence)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코딩 구조화의 결과와 관련된 주요범주와 하위범주 및 개념 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7〉과 같이 요약된다.

〈표 7〉 근거 이론적 코딩 패러다임의 결과

코딩 패러다임 요소	주요범주	하위범주	개념
결과: 주민의 참여의식 변화와 마을사업의 발굴	주민의 참여의식 변화	주민의 마을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	끊임없는 설득, 주민과 소통, 주민의 이해, 주민과 협력적 관계, 메신저 역할, 주민의 의견수렴
		주민참여 유도와 설득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	주민협의체, 주민총회, 스마트 도시재생 리빙랩, 네트워크 형성,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 주민설명회, 주민워크샵, 운영위원회, 주민 회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마을사업 발굴	주요한 마을사업의 제안과 발굴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보안등, 로봇주차장, 커뮤니티 플랫폼, 드론앵커 센터, 항공기 전시관, 태양광 놀이터, 스마트 그린 하우징, 스마트 공연장

다음의 심층 인터뷰 내용은 '주민의 참여의식 변화'에 관한 결과(consequence)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심층 인터뷰 내용은 고양시 화정동 LH 연구위원 L모 씨, 부평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담당 주무관 P모 씨, 부평구 스마트시티 전문코디 K모 씨 등의 '주민의 참여의식 변화'에 대한 의견이다.

> "그런 걸 다시 풀어야 할 문제고 그다음에 그런 걸 관리하는 주체를 협의체를 통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거기도 수익사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종류는 많아지는데 선정하고 관리 문제로 플랜(plan)을 짜기가 어렵고. 주민들도 차츰 이해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계속 들어오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반복이지 지금 계속 들으시니까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건가. 지난번에도 설명했고 여기도 설명했는데 이번 거랑 지난 거랑 뭐가 다르지 근데 주민 중에 열 분이 매번 똑같이 열 분 오시면 좋은데..." 〈L〉
> "현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중간 과정으로 메신저 역할을 잘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관과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 그런 내용을 주민한테 잘 이해시키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겪지만 그 분들의 의견을 100% 수렴하여 다 반영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실행하면서 뭔가를 계획했을 때, 이런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잘 시켜드리고, 같이 좀 소통을 해나가는 그것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P〉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봇은 또 휴머노이드 로봇 생각 많이 하시기 때문에 로봇이 뭘 어떻게 해~ 그래서 물류 창고 예를 들어주면서 했죠. 시민들 이해시키는 과정도 정말 많은 방법을 썼었고요. 그중에 하나 말씀드렸던 주차장 부지 거기에서 조금만 힌트가 있었어요. 뭐 공연도 하고 구경하러 온 사람도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설문 받고,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뭐가 있었으면 좋을까요? 선택 정도 주고 주관식은 거의 답이 안 나오지만 어쨌든 제시할 기회의 과정을 거쳤고, 구청장님이 사실 이런 데까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진행하면서 부구청장님이 관심이 높으셨어요." 〈K〉

다음의 심층 인터뷰 내용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마을사업 발굴'에 관한 결과(consequence)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심층 인터뷰 내용은 고양시 화정동 LH 연구위원 L모 씨, 부평구 스마트시티 전문코디 K모 씨, 고양시 화정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D모 씨 등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마을사업 발굴'에 대한 의견이다.

"거기에 일부 추가해놓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고양시 지역을 좀 찾아봐야 하는데 그냥 이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스마트시티처럼 방범하고 교통하고 그쪽이 많으니까 50억을 투자해서 보여줄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주민들은 불편할 거 같고 그래서 주민들이랑 모아놓을 아이템을 제가 그렇게 찾아서 인위적으로 넣었어요. 그건 아까 전문가들한테 대신에 그걸 보여준 다음에 전체 리스트가 됐을 거잖아요. 지역주민 분들이 다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요런 건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존 자료하고 주민들한테 설문 다시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주민들한테 설문자료를 줬어요. 주민들끼리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협의를 해서 자신들이 우선순위를 1인당 하나씩 다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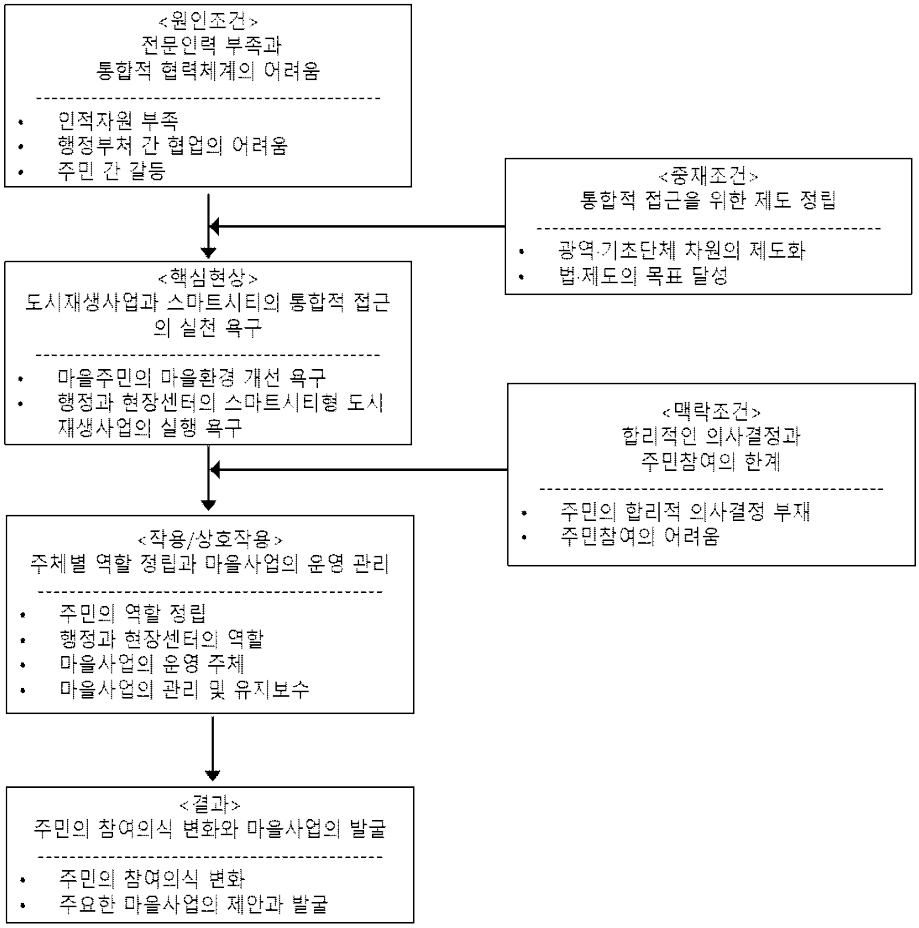
"이제 그것들을 해결하는 게 결국은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설득하는 것도 근거 없이 하기가 참 힘들고요. 그럼 같이 보면서 현재 이렇고요. 저분들이 이야기는 이렇고요. 저희 계획은 이렇고요. 여기에 이러한 부작용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요거 뒤에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염려는, 지적하신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커뮤니티 플랫폼을 저희가 굉장히 설계 단계에서 고민하고 했는데요. 그런 역할을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K〉

"그런데 드론이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감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반대도 많이 하고, 중간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 반대와 상관없이 이게 실행을 바로바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게 드론 부분만큼은 어쨌든 이제 좀 그 시간에 하루에 뭐 한 번 한두 번 돌린다거나 그런 부분은 합의하되, LH랑 같이 믿고 가기로 했어요. 그 부분은 처음에 사실 그 반대가 많았고, 그 외에 스마트시티 서비스들, 주민들과 함께할 서비스를 같이 발굴하고 있는데, 드론 부분에는 LH에서 진행하되 주민들한테 불편을 증가시키는 부분들은 같이 진행해야 하구요." 〈D〉

7. 코딩 패러다임: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과정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상시에서 도출된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과정에 관한 코딩 패러다임의 요소별 범주들을 모형으로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이렇게 구성된 코딩 패러다임 모형의 세부적인 내용은 상기에서 기술된 각각의 코딩 구조화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묘사된 설명과 심층 인터뷰의 직접 인용된 내용을 참조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그림 3〉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코딩 패러다임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사례를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7년에 스

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12월 현재까지 추진 중인 경기도 남양주시와 인천시 부평구, 경기도 고양시 등 3곳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분석의 사례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천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주요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Strauss & Corbin의 근거이론 방법론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의 실천을 위한 핵심현상으로써,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 욕구'가 제시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핵심현상의 원인조건, 중재조건, 맥락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 등을 도출하였다.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과 시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 욕구가 중요하다. 즉,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지역주민과 행정 등의 실천 욕구'의 핵심현상에 대한 범주로서, '마을주민의 마을환경 개선 욕구'와 '행정과 센터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실행 욕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사례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문제인식과 마을현안과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과 참여 욕구 등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행정과 현장센터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행의 실천 의지와 노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둘째,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 두 전문분야를 통합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과정에서 전문인력 부족과 행정부처 간 협업의 어려움, 주민 간 갈등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즉,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천을 위한 '통합적 실천'의 원인조건에 해당하는 주요범주로서, '인적자원의 부족', '행정부처 간 협업의 어려움', '주민 간 갈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라는 두 전문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필요하나, 두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실천 가능한 전문가는 현장에 부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두 분야를 모두 이해 가능한 전문코디를 지역에서 양성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교육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법·제도적 정립이 필요하다. 즉,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천을 위한 '통합적 실천'의 중재조건에 해당하는 주요범주로서, '광역·기초단체 차원의 제도화'와 '법·제도의 목표 달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근거법에 해당하는 「도시재생 특별법」에서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스마트도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이와 관련된 조항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 지정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실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규정하는 사업 이외에 스마트도시법에 따

른 스마트도시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의 항목으로 추가한다. 또한, 스마트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이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의 적용을 도시재생사업과 통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과 지속적인 마을사업의 운영 관리가 요구된다. 즉,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천을 위한 '통합적 실천'의 작용/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주요범주로서, '주민과 행정, 센터의 역할 정립', '마을사업의 운영 주체', '마을사업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천을 위한 주민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마을계획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고스란히 담고 마을계획이 실천될 수 있는 주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사례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활성화계획 수립 초반부터 주민협의체를 설립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는 확립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사업들이 고스란히 활성화계획 안에 담겨지고 실행되더라도 커뮤니티 공간 등 단위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을 주민과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사례조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한 네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한계점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례연구에서 기인하는 방법론상의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실증적 후속연구가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의 여건이나 주민들이 희망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전역에서 급증하게 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에의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기술의 선정 및 적용 용이성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현장에서 스마트시티의 통합적 실천을 위한 다양한 주민 체감형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철·최조순. (2018). 공공가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비판적 고찰, 「정책개발연구」. 18(2): 239-271.

권향원·최도림. (2011) 근거이론적 방법의 이론화 논리에 대한 이해: 한국행정의 비맥락성과 방법론적 편향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1): 275-302.

김경화 외. (2015).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모형개발. 「국토계획」. 52(5): 227-237.

김성곤. (2011). 체육 교육학 연구에 있어서 근거 이론적 접근 방법의 활용. 「교과교육연구」. 15(2): 371-390.

김인숙. (2011). 근거이론의 분기: Glaser와 Strauss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2): 351-380.

김준현. (2010). 행정사례연구 접근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전망과 한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2): 321-341.
김태영. (2016). 사회적경제 영역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분석: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적용. 「정부학연구」. 22(2): 81-125.
노춘희 외. (2017). 미래도시와 재생. 파주: 형설출판사.
도명록. (2015). 근거이론의 한국 행정 이론의 형성 가능성.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배남인. (2016).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방안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성순아. (2015).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활동의 영향분석: 창원시와 청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미령·성주인. (2004).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여관현. (2017). 근거이론을 활용한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의 실천적 함의: 시흥시 도일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3): 39-70.
여관현·이미숙. (2020). 주민학습과 실천과정에서 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실천연구: 은평구 향림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21(1): 1-22.
오병록·이지훈·고연경. (2018). 전라북도형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적용 방안. 전북연구원.
윤병훈 외. (2020).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주체별 역할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 21(6): 181-200.
이도희·김현미. (2013). 근거이론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운영 인식에 대한 연구. 「경영경제연구」. 35(2): 141-168.
이동성·김영천.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20(2): 1-26.
이미숙·여관현·김창훈. (2020).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스마트도시계획이 도시동태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안양시를 중심으로. 「한국측량학회지」. 38(1): 57-67.
이민우·이명식·정성원. (2016).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참여자 간 갈등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2(1): 117-128.
이숙정·이경아. (2007). 특수교육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이론과 실제. 「정신지체연구」. 9(1): 123-147.
이영범·박성우·남승연·정무권. (2012). 근거이론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지속발전 모형에 대한 연구: 서울지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2): 355-387.
이영아 외. (2008). 시민참여형 도시정비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방안. 국토연구원.
이영은 외. (2019).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스마트기술 적용 가능성과 활용방안. 토지주택연구원.
이자은. (2019).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통한 주민들의 참여인식 및 행태변화 분석: 장위동 도시재생사업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54(7): 24-41.
이현주. (2016). 자활기업에서 성장한 사회적기업의 기업운영 경험: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2): 169-191.
이희정 외. (2019). 주민참여형 스마트 도시재생. 「도시정보」. 445: 4-12.
조상필. (2019).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주·전남지역 능동적 대응 필요. 광주전남연

구원.
조준혁. (2020).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리빙랩의 핵심요소와 그 영향. 「도시설계」. 21(5): 51-70.
최귀순. (2005). Strauss와 Glaser의 근거이론방법론 비교. 「정신간호학회지」. 14(1): 82-90.
최지영. (2012). 근거이론의 개념과 연구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홍석·홍성만·주경일. (2003). 사회갈등의 근거이론적 이해: 댐건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4): 169-191.
한승주. (2010). 성과급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근거이론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4(4): 29-58.
홍순구·한세억·이현미. (2014). 감천문화마을 재생사업의 주민참여 영향요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2): 113-134.
홍연·이상호. (2012). 홍콩 사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8(8): 55-62.
황윤식·김성규·김경배. (2019).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IDI도시연구」. 16: 185-208.
Anderson, M. H. (2008). Social Networks and Cognitive Motivation to Realize Network Opportuniti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9: 51-78.
Glaser, B. G. (1978). *Theoretical Sensitivity: Advances in the Methodology of Grounded Theory.* CA: Sociology Press.
Glaser, B. G. and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Y: Aldinede Gruyter.
Morse, J. M. (2001). *Situating Grounded Theory within Qualitative Inquiry.* in Schreiber, R. S. and Stern, P. N.(ed.).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Schreiber, R. S. and Stern, N. (2001).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Silverman, D. (2011). *Interpreting Qualitative Data: Methods for Analyzing Talk.* Text and Interaction(4th edn.), London: SAGE Publications.
Strauss, A. L. and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th edn. SAGE Publications.
Strauss, A. L. and Corbin, J. (1990).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여관현(呂官鉉): 현재 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스마트도시 등이다. 글로벌부동산연구원 편집위원장, 서울시 불광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코디,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분과위원장 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An Analysis on the Spatial Pattern of Local Safety Level Index Using Spatial Autocorrelation”(한국측량학회지, 2021), “빈집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근린 환경요인 탐색”(도시설계, 2020), “주민학습과 실천과정에서 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실천연구”(서울도시연구, 2020), “The Effect Analysis of Smart City Planning on Urban Dynamics Using System Dynamics Method”(한국측량학회지, 2020) 등 40여 편이 있다(motelkh@anyang.ac.kr).

이미숙(李美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스마트도시, 데이터 거버넌스, 시스템 다이내믹스이며, 주요논문은 “공간적 자기상관을 활용한 지역안전지수의 공간패턴 분석(2021)”, “스마트도시 정보 관리를 위한 도시 데이터 분류체계 정립 및 적용에 관한 연구(2021)”,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스마트도시계획이 도시동태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안양시를 중심으로 (2020)” 등이 있다(mslee0414@anyang.ac.kr).

〈논문접수일: 2021. 5. 24 / 심사개시일: 2021. 5. 27 / 심사완료일: 2021. 7. 2〉

Abstract

A Study 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an Integrated Approach about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Smart City: Through Grounded Theory

Yeo, Kwan Hyun

Yi, Mi Sook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smart city-typ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rough grounded theory and then looking for practical implications of integrated approach about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smart city. Three cases of the smart city-typ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2017 were selected for this case stud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ractical implications for an integrated approach about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smart city. First, it was found that the need for integrated implement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smart city is important. Second, there was a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difficulties in cooperation between administrative departments, and conflicts among the resident.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an integrated approach to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smart city. Fourth, the process of collecting residents' opinions through rational decision-making and continuous operation and management of village projects are important.

Key Words: Urban Regeneration Project, Smart City, Grounded Theory, Integrated Approach, Major Phenomenons, Contextual Conditions